

대학에 _ 바란다

“대학이 그 누구보다, 빨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권형진 | 교수신문 교육보도부 차장



우연히 케이블 방송에서 본 <공공의 적 2>가 기억에 남은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이다. 우선 고등학교이긴 하지만 이 영화에서는 사학재단 이사장이 공공의 적으로 등장한다. 게다가 재단을 물려받기 위해 교통사고로 위장해 형을 살해한다. 영화의 설정이 극단적이긴 해도, 과거 사학 분류에서 부모자식 간, 혹은 형제 간 다툼이 그 출발점이 된 사례는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다. <두사부일체>와 같이 조직폭력배를 다룬 액션 코미디 영화에서조차 사학 비리를 양념으로

다루는 것을 보면, 사학을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일반적 인식을 엿보는 것 같아 씁쓸하기까지 하다.

정작 이 영화에서 인상 깊었던 대목은 다음의 대사다.

“왜 항상 나쁜 놈들보다 24시간 빠르지 못하는 겁니까. 검찰이 나쁜 놈들보다, 검찰 일에 제멋대로 끼어드는 그 누구보다, 빨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재산을 빼돌려 다음날 미국으로 도피하려는 사학 재단 이사장을 막기 위해 영장 받

부를 요청하는(출국 금지 요청인지는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다) 부장검사에게 지검장이 한 말이다. 지검장의 대사에서 ‘검찰’을 ‘대학’으로 바꾸면 딱 우리나라 대학이 처한 현실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영화를 보고 나서도 내내 머릿속을 맴돌았다.

한쪽에서는 ‘대학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이라는 말의 상찬(賞讚)이 넘쳐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제멋대로 끼어드는 그 누구’에게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며 동네북 신세를 면하지 못하는 게 현재 우리나라 대학의 모습 아닐까. 대학을 최고 전문가들이 모인 집단이라고들 하는데 왜 늘 대학은 정부에, 정치권에, 사회에 끌려 다니는 모습만 보이는 것일까. 대학이 그들보다 앞서 답론을 제시하면서 우리 사회의 변화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는 없는 것일까. 이런 안타까움과 아쉬움을 풍자적으로 표현한 게 “(대학이) 제 멋대로 끼어드는 그 누구보다 빨라야 되는 것 아닙니까”라는 대사가 아닐까 싶다.

대학을 향한 가장 큰 아쉬움은 아무래도 ‘평가’ 문제일 것 같다.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고 난 후 대학은 한껏 기대에 부풀어 있다. 고등교육 재정 규모를 OECD 국가 평균수준인 GDP 대비 1% 수준 이상으로 확대하고, 지역대학을 육성하겠다는 것이 고등교육 분야 핵심 국정과제인 탓이다. 지역대학 육성 방안은 지역 거점대학 육성 사업이나 특성화 사업 신

설을 포함하고 있고, 소득연계 맞춤형 국가장학금도 확대할 예정이어서 대학에 대한 재정 지원이 지금보다는 늘어나리라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수도권 대학 역시 지역대학만큼은 아니지만 지원 규모가 늘어날 것이라고 교육부는 강조한다.

하지만 ‘GDP 대비 1%’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는 확실하지 않다. 역대 정부치고 이를 강조하지 않은 적이 없었지만 구호에 그치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다. 이번에도 재정확보 수단이 명확하지 않다. 대학은 초·중등 분야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처럼 확실한 법적 근거를 두기를 원하지만 이는 정책 담당자들이 원하는 방식은 아닌 듯하다. 지역대학 육성 또한 가까운 문민정부의 5·31 교육개혁 방안에서부터 언급됐지만 지역대학은 ‘아직도’ 위기다. 시혜적 차원에서 재정지원사업을 만드는 식의 접근으로는 지역대학이 위기를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지적이고 보면 이는 교육부 혼자 나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현실적으로는 ‘평가체제 개선’에 대학의 관심이 집중돼 있는 듯하다. 아무리 재정지원사업이 확대되어도 평가방법이 바뀌지 않는다면 지난 정부 때의 악몽이 재현될 수도 있는 탓이다. 잘 알다시피 이명박 정부는 획일적 정량지표로 대학을 평가해 재정지원과 연계시키는 바람에 비판을

받았다. 교육역량강화사업이 대표적이고, 정부 재정지원 제한대학 평가 역시 그러했다. 여기에 사용된 지표가 교육역량을 제대로 평가하고, 부실대학(정부 재정지원 제한대학이 곧 부실대학은 아니지만 언론과 대중은 그렇게 받아들인다)을 가려낼 수 있는 지표인지조차 명확하지 않았다. 그래서 교육부도 지난 3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설립 목적과 유형, 지역 등 개별대학의 특성을 반영하고, 교육의 질에 중점을 두는 평가로 대학 구조개혁 및 평가 체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그 일환으로 올해 교육역량강화사업에서는 정성 평가를 일부 도입할 계획이다.

궁금증은 여기서부터 출발한다. 대학의 특성을 반영하고 교육의 질을 평가해 달라고 정부에 요구하는 대학은 과연 그러한 평가를 제대로 하고 있는가 하는 궁금증이 바로 그것이다. 획일적 정량평가에 대한 지적은 정부에서 하는 대학평가나 언론사 대학순위평가에서만 제기되는 문제가 아니다. 대학 내부에서 이뤄지는 평가, 즉 교수업적평가나 학과평가에서도 끊임없이 제기되는 문제다. 특히 교수 책임용이나 승진 평가, 정년보장 평가가 논문 실적 위주로 진행되면서 제대로 된 연구가 사라져간다는 비판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과거에는 한국연구재단 등재 학술지 게재를 요구하던 논문 실적도 갈수록 SCI나 SSCI, A&HCI, SCOPUS 등재지로 옮겨가고

있다. 이공계열뿐 아니라 사회과학 분야에서 SSCI와 같은 국제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최근에는 영향력 지수(IF)까지 고려해 논문을 게재한 저널이 해당 분야에서 상위 몇 퍼센트에 속하는지에 따라 점수를 차등화해 부여하는 대학도 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엄밀히 말해 논문의 질을 평가하는 것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인문학 분야의 경우는 더 심각해 사실상 제대로 된 평가방법조차 찾지 못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학의 소재지가 서울이나 지역이나에 따라 취업률과 충원율의 출발선이 다르듯 연구 실적도 비슷하다. 논문이 많이 나오는 분야가 있고, 그렇지 않은 분야가 있다. 교수 개인의 세부 전공까지 따지고 들면 더 복잡해진다. 그런데도 하나의 잣대로 평가하려다 보니 그냥 웃어넘기기에는 쓸쓸한 해프닝도 일어난다. 한 지역 국립대 교수가 전한 이야기를 보자. 국립대는 올해부터 정년보장을 받지 않은 기존 교수에게까지 교원 성과급적 연봉제(성과연봉제) 적용이 확대됐다. 교육부에서 내려온 성과연봉제 지침에 따르면, 단과대학 안에서 평가단위를 5개로 나눌 수 있다. 이 교수가 속한 단과대학에는 모두 9개 학과가 있다. 1~2개 학과를 묶어서 평가해야 한다. 그런데 서로 논문이 많이 나오는 학과와 함께 평가받는 것을 피하려 하다 보니 평가단위조

차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A학과와 평가하면 C등급이 되고, B학과와 하면 S, A 등급이 나오는데 누가 A학과 함께 평가받으려고 하겠느냐”는 것이다.

우리 대학이 교육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따지고 보면 평가제도와 무관하지 않다. 업적평가가 논문 실적 중심으로 돼 있으니 교수들이 상대적으로 교육에 신경을 덜 쓸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수도권 사립대에서 베스트 티처에 선정된 한 교수의 고민을 들여다보면 이해가 된다. 운전할 때나 화장실에서 ‘어떻게 하면 강의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까’ 고민한다는 이 교수도 재임용 심사가 가까워지면서 고민이 깊어졌다. 승진을 통과할 연구업적 기준을 충족시키려면 아무래도 강의 준비에 할애해 온 시간을 줄여야 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선배들은 “강의는 시간만 때우고 그 시간에 논문을 쓰라”고 충고한다. 강의 준비에 일과의 절반 이상을 쏟아온 이 교수조차 “교수가 강의에 집착하는 건 실업자 되는 길”이라고 자조한다. 최근 몇 년 새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는 있지만 대부분 강의평가를 교육업적 평가에 활용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물론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는 지적이 있을 수 있다. 여기에는 정부의 재정 지원사업 평가가 대부분 양적 지표, 그 중

에서도 연구 중심으로 이뤄지다 보니 대학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측면이 분명 존재한다. 한국연구재단 연구진흥본부장을 지낸 배영찬 한양대 교수에 따르면, 대학에서 교수를 평가할 때 주요 지표가 논문 수로 변한 것 자체가 교육부가 1995년 국책대학원 지원사업을 시작하면서부터다. 당시 사업단을 선정하면서 논문의 양적지표를 처음 적용했다. 정부의 이러한 정책은 이후 각 대학의 교수 승진, 승급의 기본 지표가 논문 수로 변화하는 계기가 됐다. 등재(후보) 학술지 제도 역시 논문 편수 중심의 교수업적평가를 강화한 한 축이다. 우리 사회에 영향력이 큰 언론사 대학순위평가도 마찬가지다. 가장 비중이 큰 지표는 역시 ‘교수연구’이다. 교육의 경우 교육활동이 아니라 외국인 교수 비율, 영어강좌 비율 등 교육의 질과는 무관한 ‘교육여건’을 평가한다.

그렇다면 대학은 온전히 책임을 면할 수 있을까. 그건 아닌 것 같다. 대학 구성원 사이에서는 “대학이 평가를 어떻게 대처하는가에 더 문제가 있다”는 시각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최근 서울지역 8개 대학 교수협의회가 개최한 ‘대학교육, 무엇이어야 하는가’ 주제의 포럼에서 한 서울대 교수가 지적한 말이다. 취업률로 대학을 평가하는 정부에 목소리를 높이는 대학이 정작 학과평가에서는 취업률을 반영해 정원을 축소하거나

통·폐합하는 것을 어쩔 수 없는 일로 받아들일 수만은 없다는 말처럼 들렸다. 지역의 꽤 유명한 사립대조차 교수업적평가에 취업률이나 충원율을 반영하려다 교수들의 반발을 사는 일은 또 어떤가. 이 역시 대학이 외부평가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할 수밖에 없는, 혹은 시대의 흐름으로만 이해하기에는 뭔가 아쉬움이 남는다.

대학개혁의 방향을 사회적 수요나 특성화라는 관점에서 바라볼 때 철학과, 사학과가 모든 대학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도 설득력이 있다. 하지만 이 말이 곧 대학에서 문사철(文史哲)을 배울 필요가 없다는 말은 아닐 것이다. 대학생이라면 인문사회계열이든 이공계열이든 대학에서 닦아야 할 기본 중 하나가 인문학적 소양이다. 문사철은 바로 그 핵심이다. 그렇다면 평가를 잘 받기 위해 취업이 안 되는 이런 학과부터 없애고 볼 게 아니다. 학과를 없애야 한다면 문사철로 대변되는 인문학적 기본 소양을 어떻게 가르칠지에 대한 고민도 함께 내놓아야 하는 것 아닐까. 다른 어느 곳이 아닌 대학이라면 말이다. 적어도 대학이라면 정부가 하는 방식과는 달라야 한다. 아니, 다른 모습을 보고 싶다.

대학평가 역시 마찬가지다. 교육부는 지난 4월 민관 합동으로 대학발전기획단을 꾸려 주요 국정과제를 세부적으로 어떻게

추진할지 구체화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평가체제 개선도 그 중 하나다. 7월 초쯤에는 내년 이후의 평가 방향을 내용을 예정이다. 하지만 구체적인 평가기준이나 방법은 올 하반기나 내년 초쯤은 되어야 나올 수 있다는 게 대체적 전망이다. 개별 사업에 맞게 평가지표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정책연구나 대학 현장의 의견 수렴 과정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이쯤에서 묻고 싶다. 정부가 뭔가를 내놓기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대학이 먼저 새로운 대학평가를 제안할 수는 없을까. 물론 교육부는 평가지표나 방법을 확정하기 전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칠 것이다. 이 과정에서 대학이 이런저런 제안을 할 수도 있다. 그런 제안이 반영될 수도 있다. 그렇지만 교육부가 마련한 기본 평가를 자체가 바뀌지는 않을 것이다. 그간의 경험에 비춰보면 대개 의견 수렴 과정이란 반영되는 범위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대학들의 비판을 받아들여 교육역량강화사업의 평가지표를 해마다 조금씩 수정했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변하지 않은 사례를 보면 알 수 있다. 설사 대학들의 의견이 대폭 수용된다고 해도 그건 어디까지나 교육부가 마련한 평가방법일 뿐이다. 대학은 대학이 가장 잘 아는데, 언젠까지 정부가 판을 깔면 대학은 그 판을 따라가는 일을 되풀이해야 할까.

대학이 나서 평가라는 판 자체를 다시 깔아야 하는 필요성에는 외부 요인도 있다. 교육부는 2014년까지 등재 학술지 제도를 폐지하고 학술지 평가를 학계 자율평가 체제로 전환하겠다고 지난 2011년 12월 발표한 바 있다. 더 이상 등재 학술지에 게재하면 몇 점, 등재후보지는 몇 점 이런 식으로 연구 실적을 평가할 수 없게 된다. 대학의 교수업적평가만이 아니다. 정부도 대학원 재정지원사업이나 연구 과제를 선정할 때 어떻게 평가할지에 대한 방안을 새로 마련해야 한다. 현행 등재 학술지 제도를 유지하되 개선하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도 있다. 어느 방향으로 결론이 나든 교육부는 그에 맞는 평가방법을 내놓을 것이다. 그렇다면 대학은 또 다시 정부가 마련한 평가방법을 좇아 교수업적평가 방식을 수정하기만 하면 끝나는 일인가. 대학이 고민해 먼저 내놓으면 교육부가 따라가는 일은 상상 속에서나 가능한 일인가. 투자 대비 효율성을 따지고, 확실한 선정 근거를 가져야 하는 정부가 대학이 제시한 방안을 100% 수용하는 힘들 수도 있다. 그렇긴 해도 대학이 먼저 대안을 제시하는 모습은 상상만으로도 즐거운 일이 아닐까.

가칭 '고등교육평가원' 설립 문제도 대학 앞에 놓인 과제 가운데 하나다. 교육부가 정량지표 중심의 획일적 평가가 아니라 대학의 특성을 반영하고 교육의 질에 중점을

두는 평가로 전환하겠다고 밝히면서부터 고등교육평가원 설립의 필요성도 다시 대두되고 있다. 재정지원 평가 따로, 기관인증 평가를 따로 받는 게 아니라 두 평가를 연계시켜야 한다는 문제의식도 고등교육평가원 설립의 필요성으로 지적된다. 예컨대 기관인증 평가 결과를 정부 재정지원 제한대학 평가에 활용하는 식이다. 정부 재정지원을 위한 평가뿐 아니라 각종 언론사 대학순위평가에 자체평가까지 대학사회의 평가 피로감이 상당한 게 현실이다. 이런저런 평가를 '한 방'에 정리하고 대학교육의 성과를 제대로 평가해 줄 수 있는 평가가 나온다면 대학으로서도 환영할 일이다.

하지만 2005년 정부가 '고등교육평가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때 제기됐던 우려와 의혹이 말끔히 해소됐다고 보기는 힘들다. 당시 제기됐던 '정부가 대학을 통제하려는 의도', '공무원 자리 늘리기 아닌가', '정부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겠는가'와 같은 질문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듯하다. 이런 시선들을 알기에 교육부도 고등교육평가원 설립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도 아직은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은 것일 테다. 그렇다고 대학(정확하게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그대로 맡겨두기에는 뭔가 미덥지 못하다는 것도 우리 사회의 일반적 시선이다. 사회적 분위기와 여론이 고등교육평가원 설

립 쪽으로 기울 때 대학은, 혹은 한국대학교
육협의회는 어떤 대답을 내놓을 것인가. 대학
이 생각하는 해법은 이것이다. 다른 그 무엇
도 아닌 바로 대학(교육)에 관한 일인데, 그

뭔가를 내놓을 준비는 하고 있는가. 다시 처
음으로 돌아가 묻고 싶다. “대학이, 대학 일
에 제멋대로 끼어드는 그 누구보다, 빨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